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코로나19 방역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중심으로-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미 연

코로나19 방역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중심으로-

지도 교수 우 지 숙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미 연

김미연의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_____ 김 봉 환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김 윤 지 _____ (인)

위 원 _____ 우 지 숙 _____ (인)

초 록

전 세계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및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약 1년 반 정도 경과된 2021년 7월경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기준으로 전국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 요인으로는 위험 인식 중에서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과 물질적 이해관계 중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의 희생 의향, 피해 인식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는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희생 의향, 피해 인식이 정부 신뢰도와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연구 주제 분석결과 사회 위험 인식과 희생 의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지만 개인 위험 인식과 피해 인식은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 위험 인식은 정책 지지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두 번째 연구 주제인 조절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정부 신뢰도와 전문가 신뢰도는 4가지 요인 중 개인 위험 인식에만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정책을 지지할 때 사회 위기 상황이 완화되었다는 인식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시기에 따라 위험 인식은 정책 지지와 유동적인 관계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 위험 인식만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하는데 정부나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면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만 신뢰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개인의 의지 등 내재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희생 의향과 피해 인식, 개인에게는 간접적인 위험 인식으로 다가오는 사회 위험 인식 등에서는 정부나 전문가 신뢰도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신뢰도는 개인의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위험 인식에 한하여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정책 지지, 신뢰도, 희생 의향, 피해 인식, 위험 인식

학 번 : 2017-21864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 4
제 1 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4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4
2.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쟁점 6
3. 정책 개입으로 인한 피해 17
제 2 절 정책지지, 신뢰도, 위험인식 19
1. 정책 지지 19
2. 위험 인식 27
3. 신뢰도 31

제 3 장 연구 가설 및 설계 36
제 1 절 연구 가설 36
1. 위험 인식과 정책 지지와의 관계 38
2. 물질적 이해관계와 정책 지지와의 관계 38
3. 신뢰의 조절효과 39
제 2 절 연구 모형 41
제 3 절 연구 설계 43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43
1) 종속변수 43
2) 독립변수 44
3) 조절변수 45
4) 통제변수 46
2. 연구 방법 48

제 4 장 연구 결과 50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50
1. 인구통계학적 특성 50
2. 정치성향 및 통제변수 분석 52
3. 기술통계량 54

4. 상관계수 55
제 2 절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57
1. 타당성 검증 57
2. 신뢰성 검증 60
제 3 절 가설 검정.....62
1. 독립변수 회귀분석.....62
2. 조절효과 회귀분석.....65
1) 정부 신뢰도의 조절효과.....66
2) 전문가 신뢰도의 조절효과.....68
제 4 절 분석결과 해석 및 요약 71
1. 독립변수 회귀분석 결과.....71
1.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75

제 5 장 결 론 77
제 1 절 연구결과 정리 77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83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86

참고문헌 89

Abstract.....102

표 목차

[표 1] 국가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의와 개념.....5
[표 2] 2021년 7월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11
[표 3]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 설문 문항 46
[표 4] 설문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1
[표 5] 설문조사 대상의 정치 성향 53
[표 6] 통제변수의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54
[표 7] 변수의 기술통계량.....55
[표 8]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56
[표 9] 신뢰도의 요인분석 57

[표 10] 지지도의 요인분석 59
[표 11] 정부 신뢰도의 신뢰성 검정 60
[표 12] 전문가 신뢰도의 신뢰성 검정 61
[표 13] 지지도의 신뢰성 검정 61
[표 14] 독립변수의 다중회귀분석..... 63
[표 15] 정부 신뢰도 조절효과 분석결과..... 66
[표 16] 전문가 신뢰도 조절효과 분석결과..... 69

그림 목차

[그림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 요인에 대한 모형..... 4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20세기 초반 발생한 스페인 독감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2021년인 현재도 그 위기는 진행 중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시기만 해도 전문가들은 약 6개월 정도의 유행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급격한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였고, 3월 11일에는 결국 세계적 대유행을 지칭하는 '팬데믹(Pandemic)'을 공식 선언하였다. WHO는 감염병의 경보 단계를 1부터 6까지로 나누는데, 이 중 가장 위험한 등급인 6단계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된다는 의미로 '팬데믹'이라 부른다. 각 국가들은 봉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취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힘을 쏟아왔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변이에 따른 재감염 사례, 반복되는 유행이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하반기 백신이 개발되면서 일말의 희망을 보이는 듯했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보급, 순서 및 부작용, 효력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접종 이후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예측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을 비상 상황이 아닌 일상으로 규정짓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정책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일각에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타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삶의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생활 양식의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었다. 3월 중순 이후 서서히 코로나19 사태가 잡혀 나가는 듯 보였으나, 8월부터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2차 유행이 발생하였다. 2차 유행으로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전에 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2020년 겨울 3차 대유행이 발생했으며,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날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2021년 4월에도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다시 증가하여 좀처럼 코로나19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백신 보급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6월 다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8월에는 2000명이 넘는 기록을 세우면서 4차 유행이 확실시되었다. 2021년 하반기 들어서는 전 국민의 70% 이상 백신을 접종 받아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200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2021년 말 확진자 수가 하루 7000명 이상 늘어나고 중증 환자, 사망자 등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백신 패스 정책 등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 사례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꾸준히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지역별 감염 현황 등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 방역 지침 등을 꾸준히 제시하고 정책을 상황에 맞게 개편하면서 국민들이 최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활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은 다르다. 그 이유는 개인의 특성과 경험에 따라 국민들은 제각기 방역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데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중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특성 외에도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요인이 갖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다면 현 시점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더불어 앞으로 있을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책을 수행할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과 국민의 보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정책 현황

제 1 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코로나19 대유행은 2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1세기 전 스페인 독감 이후 최대 위기로 평가받고 있다(Alcendor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인 일반 감기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Korber et al., 2020). 지난 해에는 여러 제약 및 바이오 업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위기가 종료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델타, 오미크론 등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여 우세종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백신의 부작용, 백신 효력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상황을 또 다른 위기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널리 집행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거의 전 세계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행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 브라질 등 서구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표 1] 국가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의와 개념

국가	기관	정의
	세계보건기구 (WHO)	사람 간의 거리는 약 1m 이상 유지할 것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대중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사람 간의 거리는 약 1m 이상 유지할 것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함께 살지 않는 사람과의 거리는 약 2m 이상 유지할 것
일본	후생노동성	폐쇄된 공간,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드는 공간을 피하고 사람 간의 거리는 1.8m 이상 유지할 것
중국	보건위원회	대중이 모이는 공간을 피하고 사람 간의 거리는 약 1m 이상 유지할 것
캐나다	공중보건국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약 2m 이상 유지할 것
호주	보건부	사람 간의 거리는 약 1.5m 이상 유지할 것
브라질	보건위생국	기침을 하거나 코를 푸는 사람으로부터 2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보건부	공공 장소에서 사람 간의 거리를 적어도 1m 이상 유지할 것

국가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국가의 국민들이 갖는 위험 인식, 관점,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Huynh et al., 2020).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부분이다(Marchiori et al., 2020).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는데(Ahmed et al., 2018; Zhang et al., 2020), 일부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Saunders-Hastings et al., 2017; Askitas et al., 2006).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ano et al., 2020). Okuonghae & Omame(2020)은 전 세계 인구의 55%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다면 결국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은 종료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2.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쟁점

국내에서도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정책 중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자발적 혹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지지가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정부는 최대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변경해왔다.

정부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수행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산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후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정책을 다소 완화하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했으며, 이후 정부는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2020년 8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과 커피숍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8월 19일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으며, 8월 23일부터는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당초 8월 30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2주간 연장하였다. 이후 2020년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고, 10월 12일이 되어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했다.

2020년 11월 7일부터 정부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새롭게 조정하여 기존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였다. 기존의 3단계를 보다 구체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하였다. 11월 중순부터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11월 19일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1.5단계로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3차 유행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특히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상향했다. 결국 정부는 12월 6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였다.

서울·경기·인천시는 추가적으로 12월 21일 실내외 가리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처로서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행정명령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 대상 예외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처가 내려졌다.

2021년 2월 15일부터 정부는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조정하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했지만, 직계 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수도권에서 9시까지 영업이 금지되었던 시설에 대한 조치가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였다.

정부는 2021년부터 백신이 보급되는 상황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사적 모임 제한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기고 2021년 6월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다시 넘어서면서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간 유예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정부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조치를 유지하였다.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설명회나 기념식은 금지되며, 공공기관과 기업은 재택근무가 권고되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며, 클럽과 감성주점 등은 운영할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하였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 외에도 7월 13일부터는 충청남도, 14일부터는 대전과 충청북도, 15일부터는 대구광역시에서 강화된 2단계가 시행되었으며, 15일부터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2단계가, 세종시에서는 강화된 1단계가 시행되었다.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9일부터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피서 인파가 몰리면서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19일부터 자체적으로 3단계를, 강릉시에서는 19일부터 1주일간 강화된 4단계를 시행하였다.

2021년 7월 하순에 들어서도 대유행 추세는 지속되었고, 23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8월 6일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및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더 이상 영세 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오미크론 변종이 발생하고 확진자 및 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2020년 초부터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확산세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속적으로 변경해왔으며, 단계 지침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최대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시점에 정부는 2021년 6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누적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표 2]**과 같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였다.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를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의 4단계로 개편하고, 지역별로 인구와 확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1년 7월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임과 행사·집회,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종교활동,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으로 분류하여 지침을 세웠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을 4단계로 나누었으며,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은 실내체육시설(그 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장례식장, 이·미용업,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내국인), PC방이며, 4그룹은 경륜·경마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 등이다. 당시 수도권 4단계 기준으로 모임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었으며, 행사·집회는 1인 시위 이외 금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3그룹은 22시 제한에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사업장은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활동은 예배·미사·법회 비대면만 허용하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의 지침을 세웠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지자체 기관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시설의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보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백신 접종률은 높아졌지만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저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들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확진자 수와 위중 환자도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표 2] 2021년 7월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판단	지방자치단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개념	상태 유지	인원 제한	모임 금지	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3일 이상 기준 초과)	3일 이상 기준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핵심지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20명 이상
보조지표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 4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클럽 (나이트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 · 미사 · 법회만 인정
	모임 · 식사 · 숙박 자제	모임 · 식사 · 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방문면회 금지

<table>
<tr><td></td><td colspan="3">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td></tr>
<tr><td rowspan="2">학교</td><td>전면 등교</td><td>전면 등교
(지역별 상황 따라 초 3~6학년 3/4, 중·고 2/3 이상 가능)
초 3~6학년 3/4 이내
중학교 1/3~2/3
고등학교 2/3
유치원 · 초 1~2 밀집도 제외
소규모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
전면등교 가능</td><td>원격수업 전환
특수학교
1:1, 1:2
대면교육 가능</td></tr>
<tr><td colspan="3">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td></tr>
</table>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여러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할 부분은 시설별 중점 관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고위험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을 지정하여 지정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과 집중적 관리를 진행했다. 이러한 집중 관리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애초에 봉쇄했다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용이했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낳았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는 곧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개선의 노력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2020년 12월 말 이미 3단계 조치를 실시할 만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단계를 격상시키지 않았고, 2021년 말에는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입는 국민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단계를 조정할 때 10만 명당 발생률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취해왔다. 10만 명당 발생률에 따른 조정 방식은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확진자 비율을 표준화하는 방법이다. 독일은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전국에서 2만 5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7월부터 해외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영국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았을 때에는 전역 봉쇄조치를 시행했으며, 프랑스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오후 20시 이후에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단,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종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도 2021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과 더불어 이

정책이 무색할만큼 전 세계 국가들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상황도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실효성 또한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논의다. 시설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에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더불어 5인 이상 혹은 3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미 해외에서는 행위별 지침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미국 뉴욕의 경우 10명 이상, 스위스나 덴마크의 경우 5명 이상, 싱가포르의 경우 8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원들의 근무 상황, 종교 집단 혹은 결혼식 행사 등은 5인 이상 모임에 제외된 조항으로 상황과 장소에 따라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더욱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도 국민에게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마지막 쟁점은 정책목표와 대상의 불일치의 문제다. 대부분의 집단 감염은 회사나 종교시설, 병원,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데 거리두기는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수 시설이 방역 수칙(종교시설 등)을 지키지 않았는데 방역을 잘 지킨 다수(카페, 체육시설 등)의 집단이 피해를 보는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정책으로 입는 피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역 정책이라는 정당한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정하고 있지만, 유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가해지고 있다.

3. 정책 개입으로 인한 피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공중 건강 정책 개입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정부의 본래 목적과 다른 영역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쟁점과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한 불만은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와 피해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같이 공중 건강 정책 개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Lorenc et al. (2013)은 공중 건강 정책 개입으로 인해 개인의 피해를 분석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분류하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직접적 피해(Direct Harms), 심리적 피해(Psychological Harms), 불평등 피해(Equity Harms), 집단과 사회적 피해(Group and Social Harms), 기회 비용의 피해(Opportunity Cost Harms) 등이 있다. 직접적 피해는 공중 건강 정책 개입으로 인해 다른 신체적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현재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여 다른 질병을 얻게 되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심리적 피해의 경우는 공중 건강 정책 개입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외출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정책 개입이 심리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Ding et al., 2020). 불평등의 피해는 공중 건강 정책 개입으로 인해 취약 계층 및 소외 계층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로, 정책 개입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야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집단과 사회적 피해는 공중 건강 정책 개입으로 인해 특정 집단은 불이익을 받는 반면 다른 특정 집단은 수혜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불평등 피해와 유사하지만 불평등 피해의 경우 현재 빈부 격차를 더 고조시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한편, 집단과 사회적 피해는 특정 집단의 피해와 수혜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터넷 상거래 직종은 수혜를 받는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 비용의 피해는 공중 건강 정책 개입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일컫는다. 기회 비용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제적 상황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피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Bloori & Saghafian, 2021).

Bavli et al. (2020)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경제적 피해, 불평등 피해, 건강상 피해 등으로 분석하여 방역 정책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Glover et al. (2020) 연구에서도 현재 코로나19 관련 방역 정책에 따른 피해를 신체적 피해, 심리적 피해, 기회 비용 피해, 불평등 피해로 분류하고 특히 불평등의 피해를 지역, 인종, 직업, 소득 수준, 학력, 성별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정책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밝혔다. Bambra et al. (2020)는 스페인 독감 유행, 신종플루 유행 등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정책이 또 다른 건강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백신 접종 등 다양한 방역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방역 정책에 따라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 속에서 방역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에 대한 피해 인식과 국민이 정책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개선될 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정책 지지, 신뢰도, 위험 인식

1. 정책 지지

국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은 정책 집행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책 대상 집단의 정책 지지는 정책 성공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 및 일상 생활 등 이해 관계에 정책이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을 경우 국민의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는 순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정책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활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 정책 지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책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정책 대상으로부터 정책 지지를 확보하는 일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업무 중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책 지지(policy support)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Ajzen(1991)과 박정훈, 신정희(2010)는 정책 지지를 '해당 정책에 대한 개인 평가를 통해 표출되는 호의적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윤종설, 함종석(2004)은 정책 지지를 '정책이 적용되는 정치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정책 지지는 정책 순응(policy compliance), 정책 태도(policy attitude), 정책 선호(policy preference),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은 지지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태도의 구조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최희용 외, 2021). 따라서 정책 지지는 정책 태도와는 개념적으로 위계적 관계에 있으며, 정책 선호는 유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윤종설, 함종석(2004)은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집행 관료가 실질적인 정책 목표의 달성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순응을 정의하면서 정책대상 집단의 표면적 행위를 고려한 반면, 정책 지지는 정책대상 집단의 태도와 행동의 의도 등 심리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두 용어를 구분지었다. 이처럼 다양한 개념을 바탕으로 주현정, 이연택(2015)는 정책 지지를 '관련 정책에 대해 정책대상 집단이 인식하는 호의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 지지는 정책대상 집단이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책 지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게는 외부 환경에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외재적인 요인과 개인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내적인 요인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외재적인 요인으로는 정책 소통, 국가의 정치 문화

및 환경이 정책 지지의 설명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용욱 외(2018)는 ‘스포츠 7330’ 캠페인으로 발생하는 정책 소통이 SNS 활동 의도와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7330’의 정책 소통이 정책 지지와 SNS 활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다양한 소통 활동 중 ‘정책 수용자의 소통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정책 수용자가 정책을 인지하고 그 정책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면 정책 지지로까지 이어지는 정책 집행의 선순환 과정이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주경 외(2020)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지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정책홍보, 주민참여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정책 홍보, 주민참여 요인 모두 정책 지지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ring et al. (2019)은 기후변화 정책, 특히 이산화탄소 세금에 대한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수준을 넘어 국가의 정치 문화와 경제적 의존 경향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기후변화 정책 지지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국가가 이산화탄소 세금을 개인보다 산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강조할 때 국민은 기후변화 정책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이산화탄소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도 결국 국민 개인에게 부담으로 이어지나 심리적으로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책을 더 지지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책에 대한 이해 능력을 의미하는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는 정책 내용과 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인, 가족, 지역 사회, 국가 수준에서 정책의 내용과 과정이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정광호, 2008). 이러한 정책 리터러시와 연관된 정책 이해도(understanding), 정책

효능감(efficacy)과 정책 지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오은비 외(2016)는 공중 관계성, 정책PR, 정책 리터러시와 정책 지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공중 관계성이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공중이 조직, 즉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 결과 공중 관계성, 정책PR, 정책 리터러시가 모두 정책 지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현정 외(2015)는 정책PR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때 정책 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 효능감은 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의 인지적 태도의 한 유형으로, 정책 이해와 정책 리터러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정책PR은 정책 효능성에 정(+)의 영향을 주고, 이러한 정책 효능성이 정책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형미 외(2018)도 국가안보 정책 이슈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정책PR 활동, 조직-공중 부정 관계성 인식, 정책 지지 간의 연계를 분석하였으며 정책 리터러시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PR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책 리터러시는 정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조직-공중 부정 관계성 사이의 연계에 대한 조절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왔다.

정책 지지는 언론이 정책대상 집단에게 정책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김소영, 금희조(2019)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언론 매체에서의 정치 프레임이 메시지 평가, 정서적 태도, 정책 지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치 프레임은 과학 프레임에 비해 수용자들이 메시지의 사실성과 신뢰도는 낮게 평가하지만 긍정적인 정서적 태도와 정책 지지를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형민, 박진우(2019)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개발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편향적인 원자력뉴스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들의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태도를 다양화하였다. 고태성 외(2020)는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언론의 이득-긍정, 손실-부정 프레이밍에 따른 메시지 효과 차이로 분석하는 전망이론에 근거하여 정책 지지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긍정 프레임이 부정 프레임보다 이득 인식과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했으며, 메시지의 유형이 '왜'보다는 '어떻게'라는 방식의 전달이 더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혁진 외(2018)는 뉴스 프레임 유형이 대체 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집단 간 정책 지지 및 정책 공정성은 뉴스 프레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인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 지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었다. 정책대상에 초점을 두면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이나 태도를 설명변수로 제시한다. 김상돈(2020)은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자리 복지정책 지지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소득 수준이 아닌 학력에만 일자리 정책 지지와 인과관계가 있고, 일자리 복지정책 지지 변인만이 정부 신뢰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동기(2021)는 정책 인지도 및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단순히 타당성, 경영 효율화 및 경영 성과, 경영 평가만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수행한 연구로서, 분석 결과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 지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지역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 태도임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공공기관 설립정책 지지에 있어

주민들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조성하는 것이 정책 활동에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해준다.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와 상징적 태도(symbolic attitude), 공익 혹은 사회지향적 인식(sociotropic conception)이라는 세 가지 접근 방식도 정책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할 때 논의되어 왔다(최희용 외, 2021). 위의 세 가지 요인 중에서도 물질적 이해관계는 합리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라는 세 가지 이론적 토대에서 비롯된 개념이다(Sears and Funk, 1991). 합리주의는 개인의 합리성이 제한된다는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여 개인의 선택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물질주의는 인간의 선택이 쾌락과 고통의 비교 형량에 기초하는 선택이라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이기주의는 타인보다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선택한다는 가정 하에 있다. 결국 세 가지 이론은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의 물질적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상징적 태도는 생의 초기부터 성인기 내내 유지되는 정치적 반응에 대한 현재의 태도를 일컫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로 구별되는 정치적 이념이나 인종차별 등을 대표적인 상징적 태도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정책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상징적 태도가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정책의 이해득실이 분명할 때에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Chong et al., 2001).

Hetherington(2005)은 물질적 이해관계와 상징적 태도를 바탕으로 정책에 따라 정책 지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요인들을 통하여 물질적 희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물질적 희생이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이 이익에 비해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책 지지를 표방할 수 있게끔 하는 용의'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상징적

태도로 표출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질적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물질적 희생이라는 요소를 고려하게 하고, 이 물질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개인이 정책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금현섭, 백승주(2010)는 물질적 희생 이론을 확장하여 정부 신뢰와 정치적 이념 성향이 정부 지출에 대한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정책 지지에 있어서 물질적 희생 뿐만 아니라 이념적 희생이 보수 성향의 집단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신뢰가 이러한 이념적 희생을 가능하게끔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책 지지는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 물질적 자기이해(material self-interest), 정치적 이념과 같은 상징적 태도(symbolic attitude), 정부 신뢰(government trust)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박현신(2021)은 희생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신뢰와 중앙 정부 신뢰를 구분하여 국민들의 신뢰에 따라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들은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또한 정부 신뢰의 신뢰 대상에 따라 정책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앞서 언급된 요인들을 통해 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가 두드러졌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보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진보 성향을 지닌 집단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Seipel, 2020),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g, 2020; Kushner Gadarian et al., 2020; Rothgerber et al., 2020). 반면 보수 집단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보수 성향을 가진 개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Koetke et al., 2021). Aldarhami et al. (2020)도 국민의 상황에 대한 인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밖에도 미디어가 국민들의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Lee & Park, 2021). 또한 Zhao E et al. (2020)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보수 미디어를 접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따르는데 더 회의적이고, 진보 미디어를 접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따르는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보수 성향의 집단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의 인식이 바로잡혔을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Lammers et al., 2020). 결국 내재적인 개인의 성향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지만,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태도가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 행정학 분야에서 정책 지지에 대한 연구는 사전에 정책PR, 언론, 정책 리터러시 등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재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얼마나 정책 지지가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정치 성향, 물질적 이해관계 등 개인 특성에 내재되어 있는 내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이례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과학적, 사회적, 정책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문제로까지 얽혀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따라서 정책을 지지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할 때 기존 연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재적인 요인과 내재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위험 인식

위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험(risk)이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Lupton, 2013).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위험은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또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한다(Adams, 1995). 한편 위험에 따른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은 '개인이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의된다(Slovic, 1992). 주관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위험도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인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위험은 객관적인 지표로서 정의되지만 위험 인식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위험 인식을 객관적인 위험 인식과 주관적인 위험 인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오미영 외, 2008). 객관적 위험 인식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평가한 위험이 발생할 확률에 근거한 실질적 위험을 뜻한다. 주관적인 위험 인식은 그야말로 개인이 개인의 관점에서 인식한 위험이며, 보통 위험 인식이라고 부르면 주로 개인의 주관적인 위험 인식을 뜻한다.

개인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위험 정보의 속성을 들 수 있다(김영대, 2015). 개인의 위험 인식은 위험 정보의 양, 위험 정보의 선정성, 논쟁여부, 위험정보 출처의 신뢰성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개인의 위험 인식은 개인, 공동체, 사회적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류현숙,

2020). 거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위험 인식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안전 문화와 법 제도적 환경에 따라 규정되며, 공동체 차원에서 개인의 위험 인식은 또래 그룹이나 소속집단, 공동체의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에 의존한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위험 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위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제시되었다. Krimsky & Golding(1992)은 위험에 대한 접근 방법을 평면적 관점(Unidimensional Perspective)에서 접근하는 기술적 접근(Technical Approach), 다차원 관점(Multidimensional Perspective)에서 접근하는 심리 측정 접근(Psychometric Approach), 맥락적 관점(Contextual Perspective)에서 접근하는 문화·사회적 접근(Cultural and Sociological Approach)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Fischhoff et al. (1978)과 Slovic(1987)은 심리 측정 접근을 제안하였다. 위험 인식의 심리 측정 요인에는 자발성(Voluntariness), 통제성(Controllability), 친숙성(Familiarity), 즉시성(Immediacy), 두려움(Dread) 등의 심리적 측면과 과학적·개인적 지식(Scientific/Individual Knowledge),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Slovic은 이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Dread)'과 '위험이 알려진 정도(Newness)'의 두 축으로 다시 분류하였으며, 위험 인식에 대한 설득력 있는 측정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Sandman, 1997). 개인 차원에서의 위험 인지와 공포는 사회적 확산 기제를 통해 사회 공동체 내부에서 공유된 위험 인식 및 사회적 공포로 자리잡게 된다(Kasperson et al., 1988). Kasperson이 제시한 위험의 사회적 확산모델(Social Amplification of Risk Model)은 개인 차원의 위험 정보와 인식이 어떻게 공동체, 사회 법제도 등과 상호작용하고 미디어를 통해 증폭되는지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험 인식은 주로 환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때 설명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국민의 정책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원자력 정책과 위험 인식에 관련한 다수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영환 외(2016)는 위험 인식 및 정부 신뢰가 원자력 정책 수용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지만, 정부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책에 대한 실망을 낮추고 개인의 위험 인식을 경감시켜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인다는 점을 밝혔다. Mayer et al. (2017)은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위험 인식과 이념적 신념에 따라 정책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험 인식은 실제 개인이 위험에 노출된 경험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즉, 본인의 이념적 신념과 실제 위험과 관계없는 주관적인 위험 인식에 따라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hao et al. (2017)은 해안지대 홍수 예방 방지에 대한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수에 대한 맥락적인 위험과 그 결과가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고, 그 위험 인식이 홍수 예방 방지에 대한 정책 지지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험 인식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Leiserowitx et al. (2006)은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과 정책 선호에 대한 관계에 대해 분석했으며, 그 결과 사람들은 가치 책무(Value Commitment)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등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후변화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비평등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은 기후변화 정책에 반대하였다. 가치 책무가 직접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없지만,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면서 기후변화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다. 김수진, 김영욱(2019)도 국내에서 문화적 편향성에 따른 위험 인식이 기후변화 정책 순응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문화적 편향성이란 상이한 '합리성(Rationality)'을 반영하는데, 이 합리성은 개별 집단이 위험을 저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선호하게끔 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특성에 대한 일련의 전제를 뜻한다. 연구 결과 문화적 편향성에 따라 위험 인식이 달라지고, 문화적 편향성의 특성 중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단,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클수록 효능감은 증대되고 정책 순응은 높아지지만 이러한 과정이 꼭 정책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미디어나 홍보 활동 또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 이선영(2016)은 간접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메시지에 의해 유발된 위험 인식과 흡연규제 정책 지지 행위와의 관계가 분노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민영(2016)은 테러 뉴스의 서술 수준과 예시 유형에 따라 테러 위험에 대한 인식과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나 홍보 메시지에 따라 위험 인식이 높아지고, 그 인식이 정책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정책 지지와 위험 인식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Xie et al. (2020)은 중국에서 위험 인식, 사회 분위기, 인지 능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디어와 정보가 국민들의 위험 인식을 고조시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Aldarhami et al., 2020; Dryhurst

et al., 2020). 물론 일부 위험 인식이 정책 지지에 대한 태도와 항상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부정하는 연구들도 있다(Yue et al., 2021). Clark et al. (2020)은 특히 개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거나 감염으로 인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개인의 코로나19 예방 행동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과 위험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반된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위험 인식과 국민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위험 인식에 따른 정책 지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인 위험 인식에 따른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인식에 따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경우 주관적인 위험 인식에서도 위험 인식 자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험 인식과 사회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한 위험 인식이 코로나19 대유행에서는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필요하지만, 기존 연구는 주로 개인 위험 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이 어떤 종류의 위험을 인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 고려해 볼 것이다.

3. 신뢰도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는 개인이 정책을 지지하겠는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정부 신뢰는 국민의 기대에 대한 부응 정도라는 측면에서 정의 내릴 수 있다. Miller(1974)는 '국민의 규범적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Chanley(2000)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탁 책무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르고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하였다. Hetherington(1998)은 정부의 성과와 연계하여 '정부의 산출물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반응하고, 부응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규정했다. Stokes(1962)는 '시민들의 규범적인 정부 활동에 대한 기대에 근거를 둔 일반적인 정부에 대한 지향'으로 정의하며 정부 관료의 효율성과 능력, 잘못된 결정에 대한 수정 등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경수 외(2013)는 '정부에게 부여된 수탁 의무와 책임을 정부가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또는 그러한 기대에 입각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 및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부 신뢰는 국민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신뢰도를 정책 내용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Hetherington(2002)은 정부 신뢰를 국민이 정책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당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게 하는 정부에 대한 보편적 인상으로 간주하였고, Scholz(1996)는 정부 신뢰를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고 나아가 특정 집단이 정부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신뢰는 위험 관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Slovic, 1993).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위험 인식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며, 많은 연구에서 일반인들의 과학 이슈에 대한 수용도나 위험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서용 외, 2010; 왕재선, 이현정, 2011). Kasperson(2003)도 정부와 일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위험의

증폭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Biel & Dahlstrand(1995) 역시 위험 인식과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왕재선 외(2015)는 정부 신뢰가 높은 집단보다 정부 신뢰가 낮은 집단이 정책에 따른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구성원 간의 편차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김인수 외(2018)는 정부 신뢰, 위험 인식과 관련하여 원자력 정책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과 정부 및 규제 기관, R&D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은 정책 수용도의 부(−)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정부 및 규제 R&D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정(+)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인식−수용 관계에 있어 조절 변인으로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정부 신뢰는 정책에 대한 태도나 수용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신뢰는 코로나 정책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송용찬 · 김유화, 2021). 정부의 명료한 코로나19 정보 및 뉴스의 전달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정책에 대한 태도와 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Zheng et al.,2020). 또한 정부의 국민들의 문제 인식이나 정치 성향은 정부 신뢰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주는 영향 요인을 매개하거나 조절하기도 한다(Rieger & Wang, 2021). 최근 백신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구되고 있는 백신 수용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국민들은 백신 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선재 외, 2021).

정부가 아닌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도 정책 지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만약 일반 국민이 백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새로운 공공보건 정책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하기 때문이다(Siegrist et al., 2007). 환경 정책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Diez et al. (2007)은 기후변화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과학자와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개인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정책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imuth et al. (2017)은 성공적인 면역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가자의 과학에 대한 신뢰가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Koetke et al. (2020)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는 보수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더욱 지지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신뢰는 최근 가짜 뉴스 등 잘못된 정보의 범람으로 신뢰의 위협을 받고 있다(Pennycook et al., 2020; Stanley et al., 2020). Earnshaw et al. (2020)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음모론이 코로나 정책, 특히 백신 접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음모론에 노출된 사람들은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책 지지 성향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모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제시된 후 음모론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문가 집단 중 하나인 의사들이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신뢰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뢰도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신뢰도가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신뢰도를 정부와 전문가라는 두 가지 요소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거나 개인의 인식을

좌우하는데 신뢰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정부 신뢰도와 전문가들의 신뢰도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신뢰도 자체가 어떻게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책을 지지하는 다른 요인들이 신뢰도에 의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제 3 장 연구 가설 및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인들은 선행 연구에서 정책을 지지하는데 고려되었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외재적인 요인과 살아오면서 정립된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내재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외재적인 조건은 미디어, 홍보 등 외부 환경 요인을 직접 설정하지 않고, 외재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위험 인식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위험 인식을 변수로 설정할 경우 개인이 인지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하나의 큰 범주로 설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개인 건강의 차원과 사회 위기 차원으로 세분화하였다.

개인의 내재적인 요인으로는 정치학에서 주로 다루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상황이 단순히 바이러스 전염 확산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넘어서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물질적 자기이해는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물질적[1] 피해 인식과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안정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감수할 의지를 나타내는 희생 의향으로

[1] 물질적이라는 표현은 물질과 상징을 구분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징적인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물질적이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세분화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었던 정치적 성향은 내재적인 요인과 구분하여 통제변수로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정치적 성향은 현 정권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향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은 기존에 정치·사회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물질적 자기이해라는 개인의 내재적 성향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정책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외재적인 요인과 내재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표는 독립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신뢰도가 정책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하지만 위험 인식과 물질적 이해관계가 신뢰도에 따라 정책을 지지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 결과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인지하는 요인과 삶을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온 개인의 가치관이 신뢰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과학, 즉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치와 과학이 함께 얽힌 매우 복잡한 위기 상황이기에 정부만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 위험 인식과 정책 지지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정책 지지와 관련하여 위험 인식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Mayer et al., 2017; Shao et al., 2017)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위험 인식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은 개인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는 위험 인식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가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위험 인식으로 세분화하여 정책 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개인 위험 인식은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 위험 인식은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물질적 이해관계와 정책 지지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라는 요인 또한 독립변수로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질적 자기이해는 개인의 삶에 있어 물질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특별한 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질적 자기이해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생활에 영향을 주어 개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피해 인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생활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안정을 위해 감수할 용의로 정의되는 희생 의향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자신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피해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책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희생 의향이 높아질 수록 정책 지지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피해 인식은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희생 의향은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신뢰도의 조절효과

앞서 정책 지지 연구와 관련하여 위험 인식과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 지지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위험 인식과 물질적 이해관계라는 독립변수가 신뢰도에 의해 그 영향력이 조절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신뢰도는 정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오경수 외, 2013).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신뢰도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쟁점과 연관되어 있기에 신뢰에 대한 지표를 정부기관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정부기관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정보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의학계,

과학계 등 현장에서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국민들이 정책을 지지할 때 전문가 집단의 신뢰가 정부 기관의 신뢰도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Dietz et al., 2007), 최근 코로나 음모론과 관련하여 의사, 즉 정부보다 독립적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Earnshaw et al., 2020). 따라서 정부 기관과 전문가 신뢰를 정책 지지에 대한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 등 4가지 독립변수가 정부 신뢰도와 전문가 신뢰도에 의해 조절효과 받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정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1. 개인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정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2. 사회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정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3. 피해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정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4. 희생 의향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정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1. 개인 위험 인식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2. 사회 위험 인식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3. 피해 인식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4. 희생 의향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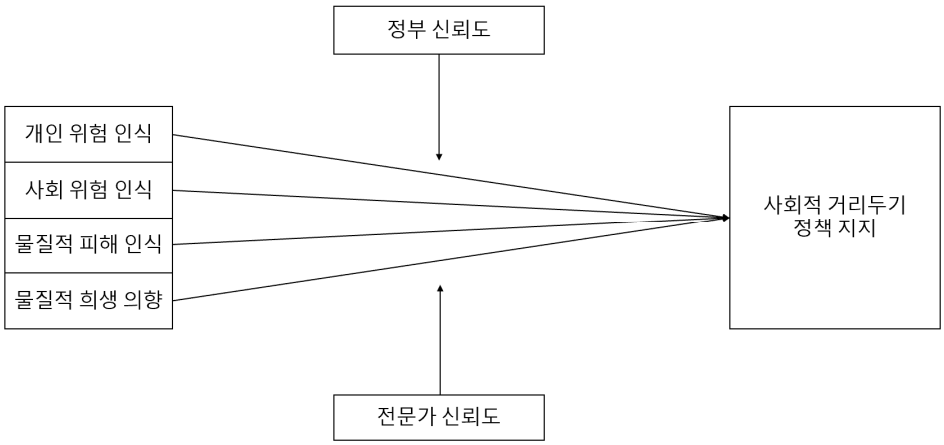
제 2 절 연구 모형

연구 가설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국민들의 위험 인식과 물질적 이해관계를 독립변수, 신뢰도를 조절변수로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이 갖는 신뢰도는 정부의 신뢰도와 더불어 현재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전문가의 신뢰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뢰도는 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로 분류하였다. 독립변수 중 하나인 위험 인식은 개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개인 위험 인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인 위기에 대한 사회 위험 인식으로 분류하였으며, 물질적 이해관계는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는 피해 인식과 피해를 받더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희생 의향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할 때 위험 인식(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과 물질적 이해관계(피해 인식, 희생 의향)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신뢰도가 위험 인식과 물질적 자기이해 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의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에 따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 요인에 대한 모형



*피해 인식: 정책 개입에 의해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희생 의향: 정책 개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이 물질적 이득에 비해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정책 지지를 표방할 수 있게끔 하는 용의

제 3 절 연구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종속 변수

결과를 분석하기 앞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변수의 구성개념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정책 지지는 개인의 감정적 반응 및 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오경수 외, 2013). 이와 같이 정책 지지는 국민의 호의적 감정이나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평가와 지지 여부'로 정의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을 살펴본다면 [표 3]과 같다. 질문 문항에서 정책 지지 관련 문항은 오경수 외(2013)을 참조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지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새롭게 제시된 정책으로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는 문항인 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잘 집행되고 있다 ②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코로나19 방역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을 함께 구성하였다. 정책 내용에 대한 동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① 정책이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② 현 정책을 지지한다 2가지 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세부적인 요인에 따라 구분한 질문은 2021년 7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기반으로 ① 다중이용시설 1그룹 운영에 대한 지침 ②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운영에 대한 지침 ③ 사업장 및 직장시설에 대한 지침 ④ 학교 및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대한 지침 ⑤ 종교 활동에 대한 지침 ⑥ 모임 · 만남 · 친목에 대한 지침 ⑦ 행사 · 집회 · 시험에 대한 지침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에 응하는 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위험 인식과 물질적 자기이해 변수로 분류되고, 세부요인으로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이 있다. 물질적 자기이해 변수 중 피해 인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희생 의향은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자신의 피해가 이득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 정책 지지를 표방할 수 있게끔 하는 용의'로 정의하였다. 위험 인식에서 개인 위험 인식은 '개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접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사회 위험 인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사회 · 경제적으로 발생할 위기 의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질문 중 개인 위험 인식을 묻는 문항은 '본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높다'로 질문하였고, 사회적 위험 인식에 대해 묻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위기 상황은 심각하다'로 구성하였다. 피해 인식에 대해 묻는 문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본인에게 오는 피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로 질문하였고, 희생 의향을 묻는 문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본인에게 오는 피해가 이익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안정을 위해 감수할 수 있다'로 구성하였다. 4가지 독립변수 문항 또한 설문에 대답하는 방식도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3) 조절 변수

신뢰도는 정부가 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로 정의된다. 그러나 정부의 신뢰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해 정부 신뢰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정부가 정책을 도덕적이고, 공정하며 믿음직스럽게 처리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라 하고 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설문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설문은 도덕성, 신뢰성, 전문성 요소를 고려하여 도덕성 측면으로는 ① 현 정부는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다 ② 현 정부는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다 ③ 현 정부는 청렴하다로 구성하였고, 신뢰성 측면으로는 ④ 현 정부는 믿음직스럽다 ⑤ 현 정부는 책임감이 있다 ⑥ 현 정부를 신뢰한다로 구성하였다. 전문성 측면으로는 ⑦ 현 정부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⑧ 현 정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⑨ 현 정부는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한다로 구성하였다(오경수 외, 2013).

전문가 신뢰도에서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신뢰성만을 고려한 ① 전문가는 믿음직스럽다 ② 전문가는 책임감이 있다 ③ 전문가를 신뢰한다로 구성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한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치 성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을 포함시켰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소득 수준은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수입 없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정치 성향은 전적으로 진보, 진보, 중도, 보수, 전적으로 보수로 분류하였다.

이 밖에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 및 지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요소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한 응답자의 수가 직업과 지역을 대표할 만한 표본으로서 적합할만큼 많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직업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자영업, 사무직, 비사무직, 학생, 주부, 직장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으며,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각 도로 구분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세종시 포함),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로 분류하였다.

[표 3]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 설문 문항

		설문 문항
신뢰도	신뢰도1	현 정부는 믿음직스럽다.
	신뢰도2	현 정부는 책임감이 있다.
	신뢰도3	현 정부를 신뢰한다.

	신뢰도4	현 정부는 공정하게 일하고 있다.
	신뢰도5	현 정부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다.
	신뢰도6	현 정부는 청렴하다.
	신뢰도7	현 정부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신뢰도8	현 정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신뢰도9	현 정부는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신뢰도10	전문가들은 믿음직스럽다.
	신뢰도11	전문가들은 책임감이 있다.
	신뢰도12	전문가들을 신뢰한다.
물질적 자기이해	피해 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본인에게 오는 피해는 편익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희생 의향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본인에게 오는 피해가 편익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안정을 위해 감수할 수 있다.
위험 인식	개인 위험 인식	본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사회 위험 인식	본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지지도	지지도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상황에 따라 잘 조정되면서 집행되고 있다.
	지지도2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지도3	다중이용시설 1그룹에 대한 지침은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지도4	다중이용시설 1그룹에 대한 지침을 지지한다.
	지지도5	다중이용시설 2, 3그룹에 대한 지침은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지도6	다중이용시설 2, 3그룹에 대한 지침을 지지한다.

	지지도7	사업장 및 직장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은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지도8	사업장 및 직장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을 지지한다.
	지지도9	학교 및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은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지도10	학교 및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을 지지한다.
	지지도11	종교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은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지도12	종교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을 지지한다.
	지지도13	모임 · 만남 · 친목에 대한 지침은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지도14	모임 · 만남 · 친목에 대한 지침을 지지한다.
	지지도15	행사 · 집회 · 시험에 대한 지침은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지도16	행사 · 집회 · 시험에 대한 지침을 지지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업체인 데이터스프링에 의뢰하여 2021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서베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총 424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 답변 45명, 중도 탈락자 30명, 비례할당에서 초과되는 인원 35명 등을 제외하여 총 314명의 유효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결과 분석은 SPSS 26.0 버전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우선 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뢰도, 지지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표준화 값을 통해 신뢰도, 지지도,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 등의 독립변수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통제변수들을 함께 포함시켰다.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에 기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와의 관계와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아래 [표 4]에서와 같이 전체 서베이 조사에 응답한 314명 중 남성은 133명(42.4%), 여성은 181명(57.6%)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았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지만 10대는 없었으며, 20대가 92명(29.3%), 30대가 103명(32.8%), 40대가 69명(22.0%), 50대가 37명(11.8%), 60대 이상이 13명(4.1%)으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7명(30.9%), 대학교 재학 대학 졸업이 198명(63.1%), 대학원 졸업 이상이 19명(6.9%)으로 나타나 대학 졸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1명(19.4%), 부산 20명(6.4%), 대구 15명(4.8%), 인천 20명(6,4%), 광주 12명(3.8%), 대전 10명(3.2%), 울산 7명(2.2%), 경기도 78명(24.8%), 강원도 10명(3.2%),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도 23명(7.3%), 전라도 19명(6.1%), 경상도 34명(10.8%), 제주도 5명(1.6%)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농·어업이 1명(0.3%), 자영업이 22명(7.0%), 판매·서비스직이 57명(6.7%), 생산·기술직이 21명(8.0%), 노무직이 9명(2.9%), 사무직이 115명(36.6%), 전문직이 20명(6.4%), 주부가 37명(11.8%), 학생이 26명(8.3%), 무직이 36명(11.5%)으로 사무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득의 경우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9명(2.9%), 200만원 미만이 49명(15.6%),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21명(38.5%),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73명(23.2%),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이 38명(12.1%),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9명(2.9%), 1000만원 이상이 15명(4.8%)으로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400~600만원 미만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 설문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33	42.4
	여성	181	57.6
연령	20대	92	29.3
	30대	103	32.8
	40대	69	22.0
	50대	37	11.8
	60대 이상	13	4.1
학력	고등학교 졸업	97	30.9
	대학교 졸업	198	63.1
	대학원 졸업 이상	19	6.1
지역	서울	61	19.4
	부산	20	6.4
	대구	15	4.8
	인천	20	6.4
	광주	12	3.8
	대전	10	3.2
	울산	7	2.2
	경기도	78	24.8
	강원도	10	3.2

	충청도	23	7.3
	전라도	19	6.1
	경상도	34	10.8
	제주도	5	1.6
직업	농 · 어업	1	0.3
	자영업	22	7.0
	판매/서비스	21	6.7
	생산/기술	27	8.6
	노무직	9	2.9
	사무직	115	36.6
	전문직	20	6.4
	주부	37	11.8
	학생	26	8.3
	무직	36	11.5
소득	수입 없음	9	2.9
	200~400만원 미만	49	15.6
	400~600만원 미만	73	23.2
	600~800만원 미만	38	12.1
	800~1000만원 미만	9	2.9
	1000만원 이상	15	4.8

2. 정치성향 및 통제변수 분석

본 연구의 특징은 통제변수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 정치 성향을 포함시킨 것이다. **[표 5]**에서와 같이 통제변수로 설정한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진보가 6명(1.9%), 진보가 66명(21.0%), 중도가 209명(66.6%), 보수가 27명(8.6%), 전적으로 보수가 6명(1.9)으로

집계되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본인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보가 가장 많고 보수는 그 다음 순이었다. 전적으로 진보이거나 보수는 같은 수치(1.9%)로 가장 적었다.

[표 5] 설문조사 대상의 정치 성향

정치성향	빈도	퍼센트(%)
전적으로 진보	6	1.9
진보	66	21.0
중도	209	66.6
보수	27	8.6
전적으로 보수	6	1.9

*정치 성향 평균: 2.8758

본격적으로 가설검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통제변수로 설정해둔 변수들이 실제로 종속변수인 지지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미리 검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변수로 고려한 변수들은 성별, 연령, 정치성향, 소득, 학력이다. 이 중에서 성별은 t검정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지지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과 정치성향에서 지지도에 따라 p값이 각각 0.022와 0.004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지역, 소득, 학력에 따라 지지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통제변수의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통제변수	t/F	p(유의확률)
성별	−0.152	0.119
연령	2.900	0.022*
지역	0.985	0.463
학력	0.550	0.738
소득	0.996	0.428
정치성향	3.873	0.004**

*p<.05, **p<.01, ***p<.001

3. 기술통계량

아래의 [표 7]에서는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으로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는 변수는 사회 위험 인식으로, 5점 척도에서 4점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위험 인식의 또 다른 종류인 개인 위험 인식은 평균이 3점을 밑도는 수치로 나타나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에서의 위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장 낮은 수치는 정부 신뢰도로 2점대 수치를 기록한 개인 위험 인식보다도 평균이 약간 낮은 2.79점이었다. 반면 전문가 신뢰도는 반올림하여 평균 3.5점대로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정부보다 전문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변수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편차
독립	피해인식	314	1	5	3.121	1.035
	희생의향				3.733	0.864
	개인위험인식				2.822	0.966
	사회위험인식				3.955	0.924
조절	정부신뢰도	314	1	5	2.792	1.041
	전문가신뢰도				3.499	0.842
종속	지지도	314	1	5	3.159	0.769

4. 상관계수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독립변수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변인들에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대부분 -0.11~0.46 내외 범위에서 결정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인 0.9보다 매우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독립변수로서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과 조절변수로서 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해도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세밀하게 살펴본 상관관계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정부 신뢰도와 전문가 신뢰도는 r=0.464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부 신뢰도와 희생 의향은 r=0.321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문가 신뢰도와 희생 의향도 r=0.267 만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인식은 개인 위험 인식과 r=0.194 만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 위험 인식과는 r=0.116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희생 의향은 사회 위험 인식과 r=0.225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했으며, 개인 위험 인식은 사회 위험 인식과는 r=0.163 정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밖의 요인들은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8]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	피해 인식	희생 의향	개인위험인식	사회위험인식
정부 신뢰도	1					
전문가 신뢰도	0.464**	1				
피해 인식	−0.057	0.019	1			
희생 의향	0.321**	0.267**	−0.085	1		
개인위험인식	0.073	.0460	0.194**	0.092	1	
사회위험인식	−0.107	0.049	0.116*	0.225**	0.163**	1

*p<.05, **p<.01, ***p<.001

제 2 절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지도, 신뢰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 따르면 신뢰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적합도(MSA)는 0.852가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x^2=1963.726, p=0.000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만족도 척도'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요인 1은 처음 설정했던 정부 및 전문가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정부 신뢰도', 요인 2는 '전문가 신뢰도'로 각각 명명하였다.

[표 9] 신뢰도의 요인분석

항목	공통성	요인		비고
		1	2	
신뢰도1	0.845	0.919	0.402	
신뢰도4	0.838	0.915	0.372	
신뢰도3	0.837	0.915	0.395	
신뢰도5	0.801	0.894	0.344	
신뢰도9	0.782	0.884	0.407	

신뢰도6	0.779	0.882	0.355
신뢰도2	0.772	0.878	0.352
신뢰도8	0.740	0.860	0.400
신뢰도7	0.650	0.798	0.450
신뢰도10	0.734	0.379	0.857
신뢰도11	0.678	0.340	0.854
신뢰도12	0.730	0.389	0.823
요인명		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
고유값		7.788	1.900
분산비율		64.899	15.830
누적분산비		64.899	80.730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85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x^2	1963.726	
	자유도(df)	45	
	p	0.000***	

추출방법: 최대우도. 회전방법: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p<.05, **p<.01, ***p<.001

오경수 외(2013)의 선행연구를 참조한 문항에서는 정부 신뢰도가 세분화되었지만,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정부신뢰도 문항은 모두 한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는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 없었던 전문가 신뢰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표 10]**에서와 같이 종속변수인 지지도 설문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6개 문항 중 공통성이 0.45미만이 되어 설명력이 낮은 문항인 1, 2, 7, 11, 15, 16 되는 문항을 제거하였고,

지지도에 대한 잠재변수를 대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추려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본적합도(MSA)는 0.86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x^2=1661.756, p=0.000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만족도 척도'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다. 총 누적분산비는 57.288로 보통 60퍼센트 이상 되어야 설명력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치에 약간 못 미치는 결과지만 60퍼센트에 근접한 수치로 간주하였다.

[표 10] 지지도의 요인분석

항목	공통성	요인	비고
지지도6	0.706	0.840	문항 1, 2, 7, 11, 15, 16 제외
지지도4	0.583	0.763	
지지도10	0.527	0.726	
지지도8	0.518	0.720	
지지도14	0.510	0.714	
지지도5	0.501	0.708	
지지도13	0.483	0.695	
지지도12	0.482	0.694	
지지도9	0.475	0.689	
지지도3	0.474	0.689	
요인명		지지도	
고유값		5.729	
분산비율		57.288	
누적분산비		57.288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86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x^2	1661.756	
	자유도(pf)	36	
	p	0.000***	

추출방법: 최대우도. 회전방법: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p<.05, **p<.01, ***p<.001

2. 신뢰성 검증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후 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 정책 지지의 신뢰성을 크론바하 알파값(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표 11]에서 정부 신뢰도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970, [표 12]에서 전문가 신뢰도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882, [표 13]에서 지지도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91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값이 0.60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 정책 지지도 요인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정부 신뢰도의 신뢰성 검정

구분	항목	신뢰도	
		CITC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정부신뢰도	신뢰도1	0.899	0.964
	신뢰도2	0.861	0.966
	신뢰도3	0.894	0.965
	신뢰도4	0.897	0.965
	신뢰도5	0.876	0.966

	신뢰도6	0.864	0.966
	신뢰도7	0.790	0.969
	신뢰도8	0.854	0.966
	신뢰도9	0.876	0.965

*Cronbach's alpha = 0.970

[표 12] 전문가 신뢰도의 신뢰성 검정

구분	항목	신뢰도	
		CITC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전문가신뢰도	신뢰도10	0.775	0.828
	신뢰도11	0.754	0.846
	신뢰도12	0.782	0.821

*Cronbach's alpha = 0.882

[표 13] 지지도의 신뢰성 검정

구분	항목	신뢰도	
		CITC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지지도	지지도3	0.661	0.908
	지지도4	0.724	0.905
	지지도5	0.657	0.909
	지지도6	0.794	0.901
	지지도8	0.680	0.907
	지지도9	0.667	0.908
	지지도10	0.691	0.907
	지지도12	0.663	0.909
	지지도13	0.674	0.908

	지지도14	0.688	0.907

*Cronbach's alpha = 0.915

제 3 절 가설 검정

1. 독립변수 회귀분석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 번째 가설 검정으로 독립변수로 설정한 피해 인식, 희생 의향,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정치 성향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상관분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회귀분석 공선성 진단(TOL)에서도 0.1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F 통계량의 유의확률 값 또한 0.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때 수정된 R^2값은 0.174로 17.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 등 중 희생 의향과 사회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 인식과 개인 위험 인식에서는 지지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 4는 채택할 수 있었고, 가설 1, 3은 기각되었다.

세부적으로 희생 의향의 표준화 β값은 0.331(p=0.000)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희생 의향이 1 증가하면 지지도가 0.331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 위험 인식은 표준화 β값이 −0.154 ($p<0.05$)으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사회 위험 인식이 1 증가할 때 지지도는 0.1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희생 의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지지도의 높아지는 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사회 위험 인식은 위험 인식이 낮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가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표 14] 독립변수의 다중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유의확률	TOL	VIF
		B	SE	β				
(상수)		−0.827	0.554		−1.491	0.137		
피해 인식		0.026	0.050	0.028	0.517	0.606	0.881	1.135
희생 의향		0.366	0.061	0.331	6.026	0.000***	0.875	1.143
개인 위험 인식		−0.075	0.054	−0.076	−1.384	0.167	0.869	1.151
사회 위험 인식		−0.159	0.058	−0.154	−2.744	0.006**	0.836	1.196
성별	여자	0.066	0.111	0.034	0.596	0.552	0.800	1.250
연령	30대	0.084	0.132	0.041	0.635	0.526	0.624	1.601
	40대	0.473	0.147	0.205	3.219	0.001**	0.648	1.543
	50대	0.304	0.182	0.103	1.666	0.097	0.693	1.443
	60대 이상	0.058	0.271	0.012	0.212	0.832	0.821	1.218

학력	대학 졸업	−0.118	0.115	−0.060	−1.027	0.305	0.785	1.274
	대학원 졸업 이상	0.206	0.229	0.052	0.899	0.370	0.803	1.245
소득	0~200만원 미만	−0.304	0.322	−0.116	−0.946	0.345	0.176	5.679
	200~400 만원 미만	−0.282	0.306	−0.144	−0.919	0.359	0.108	9.278
	400~600 만원 미만	−0.298	0.315	−0.132	−0.947	0.344	0.136	7.361
	600~800 만원 미만	−0.407	0.328	−0.139	−1.241	0.216	0.209	4.781
	800~100 만원 미만	−0.388	0.424	−0.068	−0.914	0.362	0.478	2.091
	1000만원 이상	−0.596	0.374	−0.133	−1.595	0.112	0.377	2.651
정치 성향	진보	0.651	0.377	0.278	1.728	0.085	0.102	9.833
	중도	0.383	0.364	0.189	1.051	0.294	0.081	12.308
	보수	−0.008	0.400	−0.002	−0.021	0.984	0.191	5.247
	전적으로 보수	−0.004	0.510	−0.001	−0.007	0.994	0.492	2.032
R^2		0.230						
adj. R^2		0.174						
F 변화량		4.146^{***}						

종속변수: 정책 지지

통제(더미)변수 reference: 성별(남자), 연령(20대), 학력(고등학교 졸업), 소득(없음), 정치성향(전적으로 보수)
*p<.05, **p<.01, ***p<.001

2. 조절효과 회귀분석

두 번째 가설 검정으로는 앞서 다중회귀분석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정치 성향을 통제한 후 정부 신뢰도와 전문가 신뢰도가 피해 인식, 희생 의향,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조절효과 검증은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기본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가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함께 회귀식에 투입한 후 다시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 **[표 15]**, **[표 16]**에서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 및 통제변수를 함께 분석한 회귀분석 표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독립변수의 회귀분석은 앞서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에서 보고자 하는 결과는 결국 상호작용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절차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정부 신뢰도의 조절 효과

독립변수인 피해 인식, 희생 의향,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정부 신뢰도가 조절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에서 정치적 성향 중 진보(t=2.056, p<.05)와 중도(t=2.006, p<.05)가 정책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연령에서 40대(t=2.580, p<.05)가 정(+)의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수에서는 희생의향(t=2.430, p<.05)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인 위험 인식(t=−2.106, p<.05)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에서 개인 위험 인식과 정부 신뢰도의 상호작용항(t=2.123, p<.05)이 유의미한 통계 수치를 나타내어 결국 개인 위험 인식은 정부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부 신뢰도는 피해 인식, 희생 의향, 사회 위험 인식과의 상호작용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연구 가설 중 5−1은 채택될 수 있었고, 나머지 5−2, 5−3, 5−4는 기각되었다.

[표 15] 정부신뢰도 조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유의확률	TOL	VIF
	B	SE	β				
(상수)	−0.701	0.465		−1.508	0.133		
피해 인식	0.009	0.044	0.010	0.206	0.837	0.818	1.223
희생 의향	0.138	0.057	0.125	2.430	0.016*	0.685	1.461

개인 위험 인식		−0.100	0.047	−0.101	−2.106	0.036*	0.792	1.262
사회 위험 인식		−0.047	0.050	−0.046	−0.940	0.348	0.766	1.306
정부 신뢰도		0.471	0.271	0.486	1.738	0.083	0.023	42.988
상호작용항	피해인식 x 정부신뢰도	0.042	0.042	0.148	1.007	0.315	0.085	11.825
	희생의향 x 정부신뢰도	−0.053	0.048	−0.210	−1.084	0.279	0.049	20.552
	개인위험인식 x 정부신뢰도	0.095	0.045	0.305	2.123	0.035*	0.088	11.333
	사회위험인식 x 정부신뢰도	−0.034	0.047	−0.144	−0.732	0.465	0.047	21.336
성별	여자	0.009	0.092	0.004	0.093	0.926	0.792	1.262
연령	30대	0.006	0.110	0.003	0.058	0.954	0.615	1.626
	40대	0.318	0.123	0.138	2.580	0.010*	0.634	1.578
	50대	0.134	0.154	0.045	0.871	0.384	0.667	1.499
	60대 이상	−0.025	0.228	−0.005	−0.108	0.914	0.804	1.244
학력	대학 졸업	−0.070	0.096	−0.035	−0.731	0.466	0.777	1.287
	대학원 졸업 이상	0.152	0.192	0.038	0.794	0.428	0.793	1.261
소득	0~200만원 미만	0.028	0.270	0.010	0.102	0.919	0.173	5.787
	200~400만원 미만	−0.022	0.256	−0.011	−0.087	0.931	0.106	9.423

	400~600만원 미만	0.066	0.264	0.029	0.251	0.802	0.133	7.547
	600~800만원 미만	−0.290	0.275	−0.099	−1.053	0.293	0.205	4.868
	800~100만원 미만	−0.080	0.355	−0.014	−0.226	0.821	0.472	2.118
	1000만원 이상	−0.090	0.317	−0.020	−0.285	0.776	0.361	2.773
정치성향	진보	0.656	0.319	0.280	2.056	0.041*	0.098	10.231
	중도	0.621	0.309	0.307	2.006	0.046*	0.078	12.896
	보수	0.550	0.340	0.162	1.616	0.107	0.182	5.507
	전적으로 보수	0.365	0.431	0.052	0.847	0.397	0.476	2.102
R^2		0.478						
adj. R^2		0.431						
F 변화량		10.112***						

종속변수: 정책 지지

통제(더미)변수 기준: 성별(남자), 연령(20대), 학력(고등학교 졸업), 소득(없음), 정치성향(매우 보수)

*p<.05, **p<.01, ***p<.001

2) 전문가 신뢰도의 조절 효과

정부 신뢰도 조절효과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인 피해 인식, 희생 의향,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전문가 신뢰도가 조절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6]와 같다. 정부 신뢰도의 조절효과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신뢰도 분석에서도 통제변수인 정치적 성향 중 진보(t=2.160, p<.05), 중도(t=2.093, p<.05)가 정책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연령에서는 40대(t=2.747, p=.01)가 정(+)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독립변수는 희생의향(t=2.552, p<.05)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인 위험 인식(t=−2.262, p<.05)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에서 개인 위험 인식과 전문가 신뢰도의 상호작용항(t=2.314, p<.05)이 유의미한 통계 수치를 나타내어 결국 개인 위험 인식은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정책지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 인식, 희생 의향, 사회 위험 인식과의 상호작용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문가 신뢰도 조절효과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 가설 중 6−1은 채택되었지만 나머지 6−2, 6−3, 6−4는 기각되었다.

[표 16] 전문가신뢰도 조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유의확률	TOL	VIF
	B	SE	β				
(상수)	−0.643	0.462		−1.391	0.165		
피해 인식	0.000	0.043	0.000	0.007	0.994	0.822	1.216
희생 의향	0.139	0.055	0.126	2.552	0.011*	0.743	1.346
개인 위험 인식	−0.106	0.047	−0.108	−2.262	0.024*	0.802	1.248
사회 위험 인식	−0.061	0.050	−0.059	−1.213	0.226	0.775	1.290
전문가 신뢰도	0.198	0.175	0.196	1.133	0.258	0.061	16.465

상호작용항	피해인식 x 전문가신뢰도	0.069	0.037	0.240	1.857	0.064	0.109	9.213
	희생의향 x 전문가신뢰도	−0.028	0.046	−0.105	−0.611	0.542	0.062	16.254
	개인위험인식 x 전문가신뢰도	0.101	0.044	0.323	2.314	0.021*	0.093	10.731
	사회위험인식 x 전문가신뢰도	−0.005	0.035	−0.021	−0.143	0.887	0.083	12.104
성별	여자	0.022	0.092	0.012	0.241	0.810	0.793	1.261
연령	30대	0.039	0.111	0.019	0.352	0.725	0.604	1.656
	40대	0.339	0.124	0.147	2.747	0.006**	0.630	1.588
	50대	0.187	0.153	0.063	1.220	0.223	0.676	1.479
	60대 이상	0.032	0.227	0.007	0.141	0.888	0.805	1.242
학력	대학 졸업	−0.078	0.096	−0.040	−0.814	0.416	0.765	1.308
	대학원 졸업 이상	0.142	0.192	0.035	0.738	0.461	0.787	1.271
소득	0~200만원 미만	0.011	0.269	0.004	0.043	0.966	0.172	5.800
	200~400만원 미만	−0.033	0.256	−0.017	−0.131	0.896	0.106	9.404
	400~600만원 미만	0.047	0.264	0.021	0.178	0.859	0.133	7.519

	600~800만원 미만	−0.308	0.274	−0.105	−1.122	0.263	0.206	4.854
	800~100만원 미만	−0.113	0.353	−0.020	−0.321	0.749	0.476	2.101
	1000만원 이상	−0.108	0.316	−0.024	−0.341	0.734	0.362	2.764
정치성향	진보	0.689	0.319	0.295	2.160	0.032*	0.098	10.255
	중도	0.645	0.308	0.319	2.093	0.037*	0.078	12.824
	보수	0.531	0.339	0.156	1.569	0.118	0.183	5.472
	전적으로 보수	0.392	0.430	0.056	0.913	0.362	0.476	2.100
R^2		0.480						
adj. R^2		0.433						
F 변화량		10.175***						

종속변수: 정책 지지

통제(더미)변수 기준: 성별(남자), 연령(20대), 학력(고등학교 졸업), 소득(없음), 정치성향(매우 보수)

*p<.05, **p<.01, ***p<.001

제 4 절 분석결과 해석 및 요약

1. 독립변수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국민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위험 인식(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물질적 이해관계(피해 인식, 희생 의향)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정부와 전문가 신뢰도가 위험인식, 물질적 이해관계와 정책 지지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소득 수준,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두었고, 여기에 정치성향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성별 혹은 연령대에 따라 위험이나 위기 상황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득 수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소득의 변화의 정도가 각 소득 수준마다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경제적 여유에 따라서도 정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학력은 학력수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반면 지역이나 직업은 통제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설문 조사 표본수가 314명으로 각 지역이나 직업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정치성향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성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수의 연구에서 정치성향을 설명변수로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개인의 인식과 의향 및 의지 등에 대한 요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치성향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 회귀분석 중 외재적 인식 요인으로 분류한 위험 인식 요인에서는 사회 위험 인식만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개인 위험 인식은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고, 사회 위험 인식은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또한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는 사회 위험 인식이 낮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사회 위험 인식 요인의 표준화 β값이 −0.154 ($p<0.05$)인 것은 사회 위험 인식이 1 증가할 때 지지도는 0.1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수치로 둘의 관계가 근소한 부(−)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위험 인식이 고조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Xie et al., 2020; Aldarhami et al., 2020).

이에 대해 여러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위험 인식과 정책 지지의 선행관계이다. 기존 연구들은 위험 인식이 고조되었을 때에 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선후관계를 기본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상황은 바로 정책이 이미 시행된 지 1 년 반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였다면 위험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책 지지가 정(+)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미 1 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 대한 피로도와 익숙함이 충분히 높아진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도 위험 인식이 정책 지지에 대한 태도와 항상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부정하는 주장이 있다(Yue et al., 2021; Clark et al., 2020). 따라서 위험 인식과 정책 지지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거나, 위험 인식이 낮아진 결과 자체가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서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정책에 순응하는 것과 정책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차이 여부이다.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것과 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다를 수 있다(김수진, 김영욱, 2019). 국민은 위험 인식이 고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 자체에는 순응할지라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인식과 정책 지지의 관계라 불명확하게 되어 개인 위험 인식이 정책 지지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독립변수 회귀분석 중 내재적 요인으로 분류한 물질적 이해관계에서는 희생 의향은 정책 지지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피해 인식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희생 의향의 표준화 β값은 0.331(p=0.000)로 정책 지지 요인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도 인식보다는 의지가 정책 지지 여부와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정책 지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이 손해나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인식 자체보다는 개인이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의향이나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의지라는 의미이다. 정책 지지에 대한 정의가 국민이 정책을 따르는 행위 자체보다는 개인의 태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윤종설, 함종석, 2004) 피해 인식보다는 의지와 더욱 명확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조절효과 회귀분석에서는 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 모두 개인 위험 인식에서만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신뢰도와 개인 위험 인식 상호작용항의 표준화 β값은 0.305, 전문가 신뢰도와 개인 위험 인식 상호작용항의 표준화 β값은 0.323으로 전문가 신뢰도가 개인 위험 인식에 대한 조절효과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한편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과 위험 인식 요인 중에서도 사회 위험 인식 요인은 신뢰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5에서 '개인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정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는 가설 5-1과 가설 6에서 '개인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정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는 가설 6-1은 채택될 수 있었고, 나머지 가설 5-2, 5-3, 5-4, 6-2, 6-3, 6-4는 기각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내재적 요인으로 분류한 물질적 이해관계와 같이 이미 개인의 가치로 형성되어 있는 요인에서는 신뢰도에 따라 정책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외재적인 요인으로 분류한 위험 인식에서도 개인 위험 인식에서만 신뢰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결과는 위험 인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인 위험 인식에 대한 설문은 개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매우 과학적이고도 구체적인 위험 인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사회 위험 인식에 대한 설문은 사회적, 경제적인 국가의 위험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개인에게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질문이었다. 결국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을 가늠하는 기준도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개인 위험 인식만이 정부 신뢰도와 전문가 신뢰도에 의해 정책 지지 영향을 달리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정리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 인식(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물질적 이해관계(피해 인식, 희생 의향)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인식, 물질적 이해관계가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칠 때 신뢰도(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같은 조건에서 정부 신뢰도와 전문가 신뢰도를 각각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정치성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전문 인터넷 조사업체인 데이터스프링에 문의하였고, 2021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비례할당 방식을 이용하여 설문자를 선정하였으며, 적절한 응답을 해 준 18세 이상 성인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희생 의향과 사회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내재적인 요인으로서는 개인의 의지와 연관이 깊은 희생 의향이, 외재적인 요인으로서는 사회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희생 의향의 경우는 희생 의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가 높아지는 정(+)의 영향력을 나타낸 반면, 사회 위험 인식은 인식이 낮아질수록 정책 지지가 높아지는 부(−)의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영환 외(2016), 장두영, 이충기(2020), Xie et al. (2020) 등 기존 다수 선행 연구에서 위험 인식이 정책 지지나 정책 수용도, 행동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정책들과 달리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지금까지 이례가 없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위험 인식과 정책 지지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선영(2016), 전영환 외(2016) 등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정책은 정책이 수립되는 시기의 위험 인식과 연관된 지지를 확인하는 연구이거나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 노출이 적은 상황에서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이미 정책이 충분히 시행된 지 1년 반이나 지난 시기에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험 인식은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위험 인식의 정의에 따르면 사람들의 위험 인식은 생소함에 기인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는데(Slovic, 1992), 이미 2년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익숙함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위험 인식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와 같은 부(−

)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피해 인식과 개인 위험 인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들이 받는 피로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주환 서울대 교수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의 효과'(2021)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유행 초기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 확산에 감소 효과를 보였고, 2차 유행 초반 즈음에도 감염 확산에 감소 효과가 나타났지만, 4차 대유행에 들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감염 확산 감소에 효과를 보인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 (2021)가 구글 이통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차~3차 유행일 때에는 사람들의 외부 이동량이 감소했지만 4차 대유행 때는 지난 1~3차 유행일 때보다 훨씬 이동량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자체의 효과성을 의문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도 위험 인식이 정책 지지에 대한 태도와 항상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반박한다(Yue et al., 2021; Clark et al., 2020). 피해 인식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 자체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피로감과 익숙함이라는 요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개인 위험 인식과 피해 인식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개인 위험 인식과 사회 위험 인식 질문 유형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한다. 개인 위험 인식을 묻는 '본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높다'라는 질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 사회 위험 인식을 묻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은 심각하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위기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개인 위험 인식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때보다 사회 위험 인식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때 더 모호하고 직관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논의해야할 부분은 피해 인식, 희생 의향,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개인 위험 인식만이 정책 지지와의 관계에서 정부 신뢰도,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 또한 개인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은 정부와 전문가 신뢰도에 따라 정책 지지에 영향이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개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라는 개인 위험 인식만은 정부와 전문가 신뢰도가 강해질수록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 신뢰에 따라 위험 인식이 달라진다는 연구(왕재선 외, 2015)와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인식-수용 관계에 있어 조절 변인으로서 효과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김인수 외, 2018). 단,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만 두고 수행한 회귀분석에 사회 위험 인식이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개인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 결과에서도 개인 위험 인식이 낮아질수록 정책 지지도가

높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독립변수 회귀분석에서 사회 위험 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아질수록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정부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지지가 정(+)의 관계로 달라진다는 점은 개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 여부가 정부나 전문가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 위험 인식, 피해 인식, 희생 의향은 정부나 전문가 신뢰도에 의해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재적인 요인과 과학적 정보에 대한 인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피해 인식과 희생 의향은 개인이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오랫동안 형성해 온 내재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만큼 내재적인 요인은 개인의 의지나 이해관계가 상황에 대한 인식에 선험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인식과 희생 의향은 개인이 이미 형성해 온 성향으로 간주한다면 정부의 신뢰도나 전문가의 신뢰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 위험 인식의 경우에는 개인 위험 인식에 비해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보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간접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즉 전문가 신뢰도는 주로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현 코로나19 대유행 현 상황에 대한 설명에 기반하고, 그 설명이 미디어 등 다른 전달 매체를 통해 전달되어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전문가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백신 효과성 등의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았을 때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 위기를 종결하기 어렵다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정부 신뢰도는 사회 위험 인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개인 위험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회 위험 인식 요인과는 달리 개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지칭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인 위험 인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정부가 제시하는 정보 또한 개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위험 인식은 정부나 전문가의 신뢰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정리하자면 희생 의향이라는 내재적인 의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위험 인식은 낮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인 위험 인식만이 정부와 전문가의 신뢰도에 따라 정책을 지지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코로나19 대유행은 기존의 어떠한 위기보다도 특수한 상황이며 현 위기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 또한 기존 정부가 세우는 정책과 차별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기존 정책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영향력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은 각 국가의 정부가 세운다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데 유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정책 지지 요인과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이슈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 및 환경 정책 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정책 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통해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살펴볼 때 다른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피해 인식, 희생 의향이라는 요인들이 정책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위험 인식, 신뢰도 등의 요인들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지 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인지하게 되는 위험 인식 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형성되는 의식 및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피해 인식과 희생 의향이라는 요인들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희생 의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에 정(+)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정책 연구에서 단순히 인식만이 아닌 개인 의지에 대한 요인들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위험 인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관계의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과 시점에 따라 위험 인식과 정책 지지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물론 기후변화 정책, 원자력 시설 정책 등 주로 과학과 연관된 정책들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위험 인식과 정책 지지의 관계는 정(+)의 관계 혹은 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는 위험 인식이 고조될수록 정책 지지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Xie et al., 202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만 고려하였을 때 사회 위험 인식이 감소할수록 정책을 지지하는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변수인 신뢰도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에는 개인 위험 인식이 감소할수록 정책을 지지하는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정책이며, 상황에 따라 정책도 계속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위기와 관련된 정책들은 일시적이거나 앞으로 시행될 정책이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인식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해준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을 지지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책의 특성과 환경 및 시점에 따라서도 위험 인식과 정책 지지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선행 연구와 달리 신뢰도를 설명변수로 분석하지 않고 조절변수로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신뢰도를 정부 신뢰도와 전문가 신뢰도로 세분화하여 조절변수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 위험 인식이 신뢰도에 따라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신뢰도를 조절변수로서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신뢰도에 따라 정책 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신뢰도에 따라 개인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신뢰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를 조절변수로 분석하였고 그 신뢰도 또한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일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위험 인식이 신뢰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 영향력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신뢰도가 성장하면서 개인의 가치관에 자리잡은 내재적인 요인(물질적 이해관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이 아닌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위험 인식은 개인이 직접 겪고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혹은 전문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사회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과 꼭 위험 인식이 고조되는 것이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개인이 실감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나 전문가의 과학적인 사실 전달을 통한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개인의 이해 관계나 의지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이와 더불어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시점에서만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는 국민들의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종단 연구가 아닌 동일한 시점에서 응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횡단 연구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횡단 연구를 통해 위험 인식이 낮아질수록 정책을 지지하는 영향력이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는 정책의 시행 여부나 위기 상황에 따라 위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 인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로 판단되는 결과와 연관 지어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추정할 수 없다. 앞서 위험 인식과 다른 정책과의 차이점이나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 추론만 하였을 뿐 아직 명확한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시점과 중간 그리고 그 이후 등 다양한 시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왜 본 연구에서 사회 위험 인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지지 관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황을 비교하여 위험 인식, 피해 인식 등의 요인들이 실제로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결과의 원인들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정책을 시기에 따라 적절한 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초점을 맞췄지만, 방역 정책 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뿐 아니라 다양한 방역 정책으로 확장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외에도 소상공인 및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재난 자금 지원 정책, 백신 보급 정책 등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정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더 명확히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다른 방역 정책들도 다양하게 고려하여 어떤 요인들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면 전반적인 방역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위험 인식과 사회 위험 인식 간의 설문에 대한 구체성 차이에서 비롯된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개인 위험 인식 문항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문했지만 사회 위험 인식의 경우 사회적 위험이라는 큰 범위에서 문항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응답자는 설문 문항을 통해 개인 위험과 사회 위험을 인식할 때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위험 인식에서도 구체적인 사회 위험 문항을 구성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지지도와 신뢰도

부분에서만 다문항으로 설정하였는데, 설명변수로 지정된 피해 인식, 희생 의향, 개인 위험 인식, 사회 위험 인식 설문 문항도 다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면 좀 더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지적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대상도 넓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보건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 정책 수행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형미, 이유나(2018). 국가안보 PR 활동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 리터러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22(6), 24-52.

고태성, 강보영, 권상희(2020).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 프레이밍이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프레이밍과 해석수준의 상호 적합성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2), 46-116.

권혁진, 이충훈(2018). 뉴스프레이밍 유형이 대체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공정성인식 및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30(3), 75-96.

금현섭, 백승주(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김기홍, 이수범, 김남이(2013). 정책 이해도 및 관여도가 공중의 정책 태도, 정보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5(3), 220-254.

김미숙, 고재경, 김지현(2007).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주민지지 결정요인 : 경기도 4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김상돈(2020).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자리복지 정책지지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10(1), 5-32.

김소영, 금희조(2019). 과학 이슈의 정치 프레임이 메시지 평가, 정서적 태도,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접종과 정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6), 65-95.

김수진, 김영욱(2019). 문화적 편향이 기후변화 정책 순응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 : 위험인식, 감정, 효능감의 매개 효과 중심 분석. 한국언론학보,

63(4), 230-274.

김영대(2015). 수정한 SARF를 적용한 위험의 사회적 증폭 메커니즘 분석-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를 중심으로-. , 11(10), 63-89.

김용욱, 임태성(2018). ‘스포츠 7330’ 캠페인의 정책소통이 정책지지와 SNS 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44(0), 67-89.

김인수, 박영원(2018). 정책의 인식-수용 관계와 정부 신뢰. 지역정책연구, 29(2), 53-79.

김주경, 김준홍, 한문성 외 1명(2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순애, 유미년(2008).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요인에 관한 연구 : 이념, 가치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류만희, 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류현숙(2020). 미래위험을 둘러싼 위험인식과 대국민 소통 :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FUTURE HORIZON, (), 28-35.

박정선, 박현순(2017). 이슈 정당성과 심리적 거리감이 갈등 이슈 관련 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연구

박정훈, 신정희(2010).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3), 1-24.

박현신(2021). 정부신뢰와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 관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2), 549-574.

송용찬, 김유화(2021). 사회자본이 코로나19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5(3),

47-71.

오경수, 천명재, 김희경(2013).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미영, 최진명, 김학수(2008).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한국언론학보, 52(1), 467-500.

오은비, 이경아, 이연택(2016). 해외안전여행정책에 대한 정책PR, 공중관계성, 정책리터러시, 정책지지의 관계구조 분석

왕재선, 문병현(2015). 정부신뢰와 과학기술에 의한 환경위험인식: 비교론적 분석.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300-319.

윤종설, 함종석(2004).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광고홍보학보, 15(3), 220-254.

이동기(2021). 정책 인지도 및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4(4), 273-295.

이민영(2018). 테러 뉴스의 서술 수준과 예시 유형이 테러 관련 인식과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1), 153-185.

이선영(2016). 위험 인식과 분노의 상호작용이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8(4), 107-132.

이수범, 김남이(2013). 정책 이해도 및 관여도가 공중의 정책태도, 정보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5권 3호, 220-254.

이연택, 이경아, 오은비(2016). 관광위기관리정책에 있어서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해외안전여행정책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28(9), 63-82.

이형민, 박진우(2019). 수용자들의 원자력 관련 이슈에 대한 선택적 언론 노출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1(4), 236-272.

장두영, 이충기(2020). COVID-19 위험인식과 건강의식이 보호동기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9(7), 191-208.

전영환, 목진휴, 김병준(2016). 위험인식 및 정부신뢰가 원자력 정책 수용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3), 85-110.

정광호(2008). 정책 리터러시 함수 분석 :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행정논총」. 46(4): 73-104.

주현정, 이연택(2015).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 있어서 정책PR이 정책효능성과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7(4): 51-71.

최철원(2009).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용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 관련 경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희용, 은재호(2021). 정책지지 결정요인과 공론화의 조절효과 :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55(4), 43-69.

황선재, 길정아, 최슬기(2021). 코로나19 백신수용성: 정부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2), 95-120.

조선일보(2021). 방역학회 “거리두기 약발 떨어져... 이대로면 하루 확진자 1만명” 8월 27일, 종합 8면.

Adams, J. (1995). Risk. London: UCL Press.

Ahmed, F., Zviedrite, N., & Uzicanin, A. (2018). Effectiveness of workplace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reducing influenza

transmission: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18*(1), 1-13.

Ajs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lcendor, D. J. (2020). Racial disparities-associated COVID-19 mortality among minority populations in the US.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9*(8), 2442.

Aldarhami, A., Bazaid, A. S., Althomali, O. W., & Binsaleh, N. K. (2020). Public perceptions and commitment to social distancing "staying-at-home" during covid-19 pandemic: a national survey in Saudi Arabia. *International Journal of General Medicine*, *13*, 677.

Anderson, James E. (1984). Public Policy Making, New York: Holt Rinehartand Winston.

Askitas, N., Tatsiramos, K., & Verheyden, B. (2020). Lockdown strategies, mobility patterns and covid-19.

Bambra, C., Riordan, R., Ford, J., & Matthews, F. (2020). The COVID-19 pandemic and health inequalitie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74(11), 964-968.

Bavli, I., Sutton, B., & Galea, S. (2020). Harms of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gainst covid-19 must not be ignored. bmj, 371.

Bendtsen Cano, O., Cano Morales, S., & Bendtsen, C. (2020). COVID-19 modelling: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Infectious Diseases*, *2020*.

Boloori, A., & Saghafian, S. (2020). COVID-19: Health and Economic Impacts of Societal Intervention Policies in the US. Available at

SSRN 3681610.

Chanley, V. A., Rudolph, T. J., & Rahn, W. M.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256.

Cheng, J. (2020). The psychology and political orientation of social distancing compliance and attitude toward mask-wearing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the US.

Chong, D., Citrin, J., & Conley, P. (2001). When self-interest matters. *Political Psychology*, *22*(3), 541-570.

Clark, C., Davila, A., Regis, M., & Kraus, S. (2020). Predictors of COVID-19 voluntary compliance behavior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Global transitions, 2, 76-82.

Dietz, T., Dan, A., & Shwom, R. (2007). Support for climate change policy: Social psychological and social structural influences. Rural sociology, 72(2), 185-214.

Ding, Y., Xu, J., Huang, S., Li, P., Lu, C., & Xie, S. (2020). Risk perception and depression in public health crises: Evidence from the COVID-19 crisi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6), 5728.

Duncan, Jack W. (1981). Organizational Behavior, 2nded. (Boston:Houghton Mifflin Company).

Dryhurst, S., Schneider, C. R., Kerr, J., Freeman, A. L., Recchia, G., Van Der Bles, A. M., ... & Van Der Linden, S. (2020). Risk perceptions of COVID-19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isk Research, 23(7-

8), 994-1006.

Earnshaw, V. A., Eaton, L. A., Kalichman, S. C., Brousseau, N. M., Hill, E. C., & Fox, A. B. (2020). COVID-19 conspiracy beliefs, health behaviors, and policy support. Translational behavioral medicine, 10(4), 850-856.

Fischhoff, B., Slovic, P., Lichtenstein, S., Read, S., & Combs, B.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s, 9(2), 127~152.

Freimuth, V. S., Jamison, A. M., An, J., Hancock, G. R., & Quinn, S. C. (2017). Determinants of trust in the flu vaccine for African Americans and Whites. *Social science & medicine*, *193*, 70-79.

Glover. R. E. et al. (2020). A framework for identifying and mitigating the equity harms of COVID-19 policy intervention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128, 35-48.

Han, Q., Zheng, B., Cristea, M., Agostini, M., Belanger, J. J., Gützkow, B., ... & Leander, P. (2020). Trust in government and its associations with health behaviour and prosocial behaviou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syArXiv Preprints.

Harring, N., Jagers, S. C., & Matti, S. (2019).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culture, economic context and instrument type for climate policy support: a cross-national study. Climate Policy, 19(5), 636-650.

Hetherington, M.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Hetherington, M. and S. Globetti. (2002). Political trust and ra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2): 253-275.

Hetherington, M.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Huynh, T. L. D. (2020). Does culture matter social distancing under the COVID-19 pandemic?. *Safety Science*, *130*, 104872.

Kasperson, R. E., Renn, O., Slovic, P., Brown, H. S., Emel, J., Goble, R., & Ratick, S. (1988).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 conceptual framework. Risk Analysis, 8(2), 177-187.

Koetke, J., Schumann, K., & Porter, T. (2021). Trust in science increases conservative support for social distancing.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4*(4), 680-697.

Korber, B., Fischer, W. M., Gnanakaran, S., Yoon, H., Theiler, J., Abfalterer, W., ... & Montefiori, D. C. (2020). Tracking changes in SARS-CoV-2 spike: evidence that D614G increases infectivity of the COVID-19 virus. *Cell*, *182*(4), 812-827.

Krimsky, S. & D. Golding, D. (1992). Social Theories of Risk. CT: Praeger Publishers.

Kupferschmidt, K. (2020). Why do some COVID-19 patients infect many others, whereas most don't spread the virus at all. *Science*, *10*.

Lammers, J., Crusius, J., & Gast, A. (2020). Correcting misperceptions

of exponential coronavirus growth increases support for social distanc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28), 16264-16266.

Lee, H., & Park, S. A. (2016). Third-person effect and pandemic flu: The role of severity, self-efficacy method mentions, and message sourc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1*(12), 1244-1250.

Leiserowitz, A. (2006).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affect, imagery, and values. Climatic change, 77(1), 45-72.

Lorenc, T., & Oliver, K. (2014). Adverse effects of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 conceptual framework.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68(3), 288-290.

Lupton. D. (2013). Risk and emotion: towards an alternative theoretical perspective, Health, Risk & Society, 15:8, 634-647.

Marchiori, M. (2020). COVID-19 and the social distancing paradox: Dangers and solutions. *arXiv preprint arXiv:2005.12446*.

Mayer, A., Shelley, T. O. C., Chiricos, T., & Gertz, M. (2017). Environmental risk exposure, risk perception, political ideology and support for climate policy. Sociological Focus, 50(4), 309-328.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Okuonghae, D., & Omame, A. (2020). Analysis of a mathematical model for COVID-19 population dynamics in Lagos, Nigeria. *Chaos,*

Solitons & Fractals, *139*, 110032.

Park, E., & Lee, J. W. (2015). A study on policy literacy and public attitudes toward government innovation-focusing on Government 3.0 in South Korea.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1(1), 1-13.

Pennycook, G., & Rand, D. G. (2020). Who falls for fake news? The roles of bullshit receptivity, overclaiming, familiarity, and analytic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88*(2), 185-200.

Rosenfeld, D. L. (2020). Political Ideology and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e United States.

Rieger, M. O., & Wang, M. (2021). Trust in government actions during the COVID-19 cri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3.

Sandman, P. (1997). Mass media and environmental risk: Seven principles. In R. Bate (Eds.), What Risk? Science, Politics and Public Health. Oxford: Butterworth-Heinmann.

Saunders-Hastings, P., Crispo, J. A., Sikora, L., & Krewski, D. (2017). Effectiveness of personal protective measures in reducing pandemic influenza transmiss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pidemics*, *20*, 1-20.

Scholz, J. T. (1998). Trust, taxes, and compliance. Trust and governance, 1, 135.

Sears, D. O., & Funk, C. L. (1991). "The role of self-interest in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1-91.

Shao, W., Xian, S., Lin, N., & Small, M. J. (2017). A sequential model to

link contextual risk, perception and public support for flood adaptation policy. Water research, 122, 216-225.

Siegrist, M., Keller, C., Kastenholz, H., Frey, S., & Wiek, A. (2007). Laypeople's and experts' perception of nanotechnology hazards.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7*(1), 59-69.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Slovic, P. (1992). Perception of risk: Reflection on the psychometric paradigm. Westport, CT: Praeger.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C. B MacGregor D. 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2), 311-322.

Stanley, M. L., Barr, N., Peters, K., & Seli, P. (2021). Analytic-thinking predicts hoax beliefs and helping behavior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inking & Reasoning*, *27*(3), 464-477.

Stokes, D. E., & Miller, W. E. (1962). Party government and the saliency of Congress. Public Opinion Quarterly, 26(4), 531-546.

Xie, K., Liang, B., Dulebenets, M. A., & Mei, Y. (2020). The impact of risk perception on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7), 6256.

Yue, R. P. H., Lau, B. H., Chan, C. L., & Ng, S. M. (2021). Risk perception as a double-edged sword in policy compliance in COVID-19 pandemic? A two-phase evaluation from Hong Kong. *Journal of Risk Research*, 1-15.

Zhang, J., Litvinova, M., Liang, Y., Wang, Y., Wang, W., Zhao, S., ... & Yu, H. (2020). Changes in contact patterns shape the dynamics of the COVID-19 outbreak in China. *Science*, *368*(6498), 1481-1486.

Zhao, E., Wu, Q., Crimmins, E. M., & Ailshire, J. A. (2020). Media trust and infection mitigating behaviou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SA. *BMJ global health*, *5*(10), e003323.

Basic Policies for Novel Coronavirus Disease Control by the Government of Japan (Summar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Tokyo, Japan, 2020; pp. 2-4.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https://sacoronavirus.co.za/2020/03/16/social-distancingguidelines/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

Physical Distancing for Coronavirus (COVID-19).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

Physical Distancing: How to Slow the Spread of COVID-19.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publications/diseases-conditions/social-distancing.html

Protection Guide (Revised Edition). http://www.scio.gov.cn/xwfbh/gbwxwfbh/xwfbh/wsb/Document/1682567/1682567.htm

Seipel, B. (2020, April 24). Thousands gather without social distancing to protest Wisconsin's stay-at-home order. *The Hill*. https://thehill.com/

Sobre a Doença. https://coronavirus.saude.gov.br/sobre-a-doenca#como-se-proteger

Staying Alert and Safe (Social Distancing).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ying-alert-and-safe-social-distancing

What Is Social Distancing and How Can It Slow the Spread of Covid-19? https://hub.jhu.edu/2020/03/13/what-is-social-distancing/

Abstract

The Support Factors of COVID-19 Prevention Policies

-Focus on Social Distancing Measures-

Kim Mi-ye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new measures for preventing viral transmission in public spaces. Among these measures, social distancing is one of the most recommended policies worldwide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virus. Meanwhile, support from the public is a necessary ingredient for the policy to be sustainable.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public support of social distancing policies. Trust (in the government and public health experts), risk

perception (individual and societal), perception of self-interest, and material sacrifice were considered as factors influencing policy support.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314 Korean residents from July 9-11, 2021, based on an internet-based surve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all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material sacrifice and societal risk percep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support of social distancing policies. In addition, trust in the government and trust in the experts moderated between individual risk perception and support for social distancing policy, while they didn't show the same relationship with societal risk perception, material sacrifice, and perception of self-interest.

Keywords: social distancing, COVID-19 pandemic, policy support, risk perception, perception of self-interest, material sacrifice

Student Number: 2017-21864